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홍준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477
----------	------

발의연월일 : 2021. 1. 19.

발 의 자 : 홍준표 · 한기호 · 최승재  
윤한홍 · 배현진 · 김기현  
홍문표 · 백종현 · 조명희  
구자근 · 권성동 · 강기윤  
홍석준 · 윤상현 · 윤재옥  
하영제 · 최연숙 의원  
(17인)

###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적인 유행과 확산에 따른 피해를 조기에 퇴치하기 위하여 국가의 특별 대책 및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권 확보와 국가 비상방역 및 의료체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퇴치에 필요한 대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둠(안 제4조).

나. 국가는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코로나19백신등의 충분하고 안정

적인 확보에 책임이 있으며, 그 확보를 위하여 국내개발 지원대책 수립 및 해외 구매 관로 확보, 관련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코로나19 백신을 훼손하거나 배분·운송·보관·접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업무종사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

라. 국가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국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의 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코로나19 치료 등에 필요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병상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바. 국가는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의료인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들 의료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이 법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진단시약, 백신 및 치료제의 확보 등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 대책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조속히 확보하여 국가 비상방역 및 의료체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서 세계보건기구(WHO)가 COVID-19로 공식적으로 명명한 감염병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적 감염병의 대응체계 발전,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확보,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한다.

③ 코로나19의 진단, 백신 접종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코로나19 대응위원회) ① 코로나19의 퇴치에 필요한 대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감염병 분야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코로나19 감시·예방·차단·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코로나19 진단시설·장비·인력의 확충 및 관련 예산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3. 코로나19 진단시약, 백신 및 치료제(이하 “코로나19백신등”이라 한다)의 확보와 국민 대상 접종에 관한 사항
4.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로부터의 유입 방지 등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코로나19백신등의 확보) ① 국가는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코

로나19백신등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확보에 책임이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코로나19백신등의 확보를 위하여 국내개발 지원대책 수립 및 해외 구매 판로 확보, 관련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코로나19백신등의 구매 및 확보 업무와 관련하여 신의성실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손해와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6조(코로나19 백신의 접종) ①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이고 조속한 접종을 위하여 코로나19 백신의 확보, 운송·관리, 업무인력과 물품의 확보, 접종대상 분류와 우선순위 기준, 부작용 저감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코로나19 백신을 훼손하거나 배분·운송·보관·접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업무종사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코로나19 백신의 접종관리) ① 국가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관리시스

템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내역을 제공하거나 접종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내역을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등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기록의 국제적 표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안전한 이동 등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 등) ① 국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의 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코로나19 치료 등에 필요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병상을 동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의 운영비 등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9조(의료인력의 확보 등) ① 국가는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이하 이 조에서 “민간의료인력”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민간의료인력에 대하여 안정적 업무에 필요한 휴식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민간의료인력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병상 동원으로 발생한 손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벌칙) ① 이 법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백신을 훼손하거나 배분·운송·보관·접종을 방해하거나 관련 업무종사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병상을 동원한 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의료인력 또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